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동용승 | 굿퍼머스 연구소장 | seridys@hanmail.net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4년에 이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주창해 왔다. 그리고 2017년 7월 독일 쾰른 재단 초청 연설에서 베를린 구상을 내놨다. 2018년 8.15 경축사에서도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 남북한이 함께 경제적 번영을 누리자는 내용이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

첫째, 평화를 우선한다. 과거에는 경제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우선 평화부터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교류 협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정전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의 궤도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작업이다. 1991.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6월 1차 남북정상회담, 2007.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난 30년 가까이 남북한은 관계 개선을 추구해 왔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결국 평화의 부재 때문이다.

둘째는 상생이다. 과거에는 북한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의 변화에 맞춰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방식이었다. 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전제하고 반 강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 지금은 북한 스스로 변화하고 우리는 이를 지원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단 이후 한국경제는 3면이 바다이고 한 면은 절벽인, 섬나라 아닌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성장·발전해 왔다. 북한이 스스로 문을 열면 한국은 더 이상 섬나라가 아니며 대륙과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을 겨냥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경제는 기초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이어가게 된다. 북한을 억지로 변화시켜 강제로 통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며 북한이 자체적으로 경제발전을 구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하는 등, 남북한의 상생을 기본으로 한다.

셋째는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후 남북한만의 경험을 넘어 동북아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블랙홀이었다.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력과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경제공동체를 꿈꾸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북한이라는 블랙홀로 인해 서로의 협력을 시도하기도 어려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을 한반도에서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남북한의 8천만 시장을 넘어 동북아 5억 이상의 거대 시장을 꿈꾼다. EU 경제공동체는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의 아데나워 정부가 철강공동체를 내세워 서방국들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됐다. 독일 통일과 함께 유럽통합은 가속화됐고, 결국 유럽통합의 중심에 통일 독일이 자리매김하였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남북한은 독립된 국가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통일 방식이 필요한 이유다.

북한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미 이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개혁은 ‘포전담당제’와 ‘사회주의기업경영책임제’로 대표된다. 시장의 개인자본도 국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5개의 경제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열어놓고 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사실상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내부적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에는 홍콩 및 화교자본에 대한 우대정책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과 제도, 시스템 구축이 수반됐다는 점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중국만 하더라도 경제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다. 남한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북한 당국 스스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경제제재만 풀리면 해외자본이 물밀 듯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해외자본이 북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북한 몫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변화를 거부해 왔고, 외부세계는 북한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북한적 특수성이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적 특수성은 오히려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외부의 변화 요구로부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

남북경협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일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북한 스스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로부터 유무상의 차관을 도입하려면 북한의 신용이 좋아야 한다. 초기에 북한의 신용도를 보완하는 데 남한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제자본을 유지하는데 남한의 자본을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남한의 전문가들과 각종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개발의 주체는 북한이다.

북한은 그동안 무상으로 받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는 무상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금 스스로 변화를 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보상이 수반되겠지만, 북한의 경제개발 모델을 상품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5대 경협사업을 구상해 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5가지의 경협 사업을 구상해 본다.

첫째, 100억달러 규모의 남북한 통화스와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5.24 조치 등이 순차적으로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교역과 임가공 사업을 중심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활기를 띠 것이다.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약 70억달러까지 이르기도 했다. 남북경협이 한창이던 시절 남북교역 규모는 개성공단을 포함할 경우 약 30억달러 정도였다. 북한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100억달러 규모의 남북한 통화스와프는 차고도 넘칠 수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 경제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의 통화스와프는 필요하다. 통화스와프를 협의하게 되면 북한의 이중화된 환율 적용을 위한 협의, 은행 간 거래를 위한 협의, 연간 단위의 청산결제 방식과 교역 범위의 규정 등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한 단일 화폐 사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도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어 있는 북한 화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북한에도 통화정책이 필요해질 것이므로 통화스와프에 의한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남북한 FTA(다른 유형도 가능하다)의 체결이다. 현재 남북한 경제교류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며, 그 사이의 거래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 남북한 교역은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규범보다는 관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무관세를 위한 원산지 확인을 비롯하여 대금 결제 방식, 상품코드 등 일관된 제도와 원칙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질서했을 뿐 아니라, 확장성도 부족했다. 타국산 제품에 비해 무관세로 인한 경쟁력을 남북한이 나눠 가지다 보니 발전성도 미흡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남한은 서로의 경제통계를 공유해야 한다. 북한의 경제통계 추계 시스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남북한 FTA는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 전력공급 정상화 프로젝트다. 북한경제의 최대 애로 요인은 전력 부족이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70년대 수준의 전력공급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발전소의 개보수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생산성이 극도로 저조하다. 발전소 터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로 전력손실률은 40% 이상에 달한다. 북한의 산업은 1970년대에 이미 전력화되었기 때문에 전력부족은 치명적이다. 그러나 전력공급을 하루아침에 정상화하기는 불가능하다. 세밀한 계획하에 전력공급 정상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우선 남한에서 생산한 전력 터빈을 북한에 공급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송배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합영전력공사를 설립하고, 북한의 전기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송배전 설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원료 입지형 송배전 설비 공급 공장을 설치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전력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수로 발전소를 비롯하여 태양력과 풍력, 조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전개함과 동시에 북한에서 생산한 전력을 남한은 물론 동북아 역내 국가들에 판매하는 방식도 구상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건설도 구상해 봄 직하다. 전력공급 프로젝트는 전후방 연관효과를 감안할 때, 북한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남북한 고속철 연결 사업이다. 북한의 철도는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다. 남북한 철도를 연결할 경우 대부분의 구간을 다시 깔아야 한다. 국내 철강 관련 회사들은 북한의 노후화된 철로를 재활용하는 데 단기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역발상을 해보자. 북한은 백지상태이므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기득권의 반발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한국, 일본은 이미 고속철 단계로 넘어간 상태다. 철도 연결은 단순히 남북한 사이의 연결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중국-남북한-일본을 연계하는 고속철 건설을 구상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의 철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지역 고속철 연결을 남한,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인 투자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먼저일 것이다. 유사한 예로 북한지역의 통신망 구축 작업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유선통신망 단계를 넘어 무선통신과 광통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전화사업을 현재의 무선통신망보다 앞선 와이파이 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과 비용이 저렴한 반면 기득권의 반발도 없기 때문에 북한지역 자체가 새로운 통신망의 시범구역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수많은 IT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다섯째,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주식거래소 개설이다. 북한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근래에 보기 드문 대규모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한다. 남한에 북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주식거래소를 개설하여 세계 각국의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전력공급 프로젝트, 고속철 프로젝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북한지역에 당장 주식거래소를 개설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한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다섯 가지 경협 제안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놓고 북미정상 간에 담판을 벌이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한 모두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남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도 도전이자 기회다. 모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적극 살려 나가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생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의 과실을 효과적으로 따먹기 위해서 남북한은 평화의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야 한다. 과거의 틀에 얽매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빠른 성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한다”.